

2014년 중앙행정기관별 업무계획 자료 중 여성관련 정책 현황

- ☞ 본 여성관련 정책 현황은 기관별 2014년 업무계획 자료를 참조하되 국정과제중심으로 재분류하였음¹⁾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법제처, 조달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통계청, 소방방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 ☞ 대부분의 기관이 국정과제 '맞춤형 고용·복지'에 대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맞춤형 취업서비스 제공 및 유연한 일자리 제공, 어린이집 및 보육서비스 확대, 육아휴직 장려 등 일하는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것임
- ☞ 통일부 등은 다가오는 통일이대에 대비하여 북한 내 임산부에 대한 인도적 지원 강화, 탈북여성 육아부담 최소화 등의 정책을 펼칠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은 대부분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및 다문화인식 제고 등 다문화가족 적응지원 강화 정책을 수행할 예정임
- ☞ 또한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 법제처,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성폭력·가정폭력으로부터의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폭력보호시설 확충 및 폭력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강화,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등의 정책을 실행할 계획임
- ☞ 이밖에 조달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은 공공구매제도 개선을 통한 여성 중소기업 참여기회 확대, 여성 아이디어 창출기반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음
- ☞ 이처럼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국정과제 중심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정책을 수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일·가정 양립문화 정착, 사회안전망에 대한 국민체감도 향상, 통일시대 준비 등 가시적 성과 달성이 기대됨



1) 다음의 기관은 2014년 업무계획 자료 내에 구체적인 여성관련 정책 없음(외교부, 환경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문화재청)



중앙행정기관별 여성관련 정책 현황

기관명	여성관련 정책(추진전략)	여성관련 국정과제
국무조정실	맞춤형 고용·복지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기획재정부	맞춤형 고용·복지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미래창조과학부	맞춤형 고용·복지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교육부	맞춤형 고용·복지	다문화가족 적응지원 강화,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창의교육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
	국민안전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통일부	맞춤형 고용·복지	다문화가족(북한주민, 탈북자) 적응지원 강화
법무부	맞춤형 고용·복지	다문화가족 적응지원 강화,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국민안전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국방부	맞춤형 고용·복지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안전행정부	맞춤형 고용·복지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국민안전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문화체육관광부	맞춤형 고용·복지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농림축산식품부	맞춤형 고용·복지	다문화가족 적응지원 강화,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산업통상자원부	맞춤형 고용·복지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보건복지부	맞춤형 고용·복지	건강한 가정 만들기, 복지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행복한 임신과 출산,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고용노동부	맞춤형 고용·복지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서비스 강화, 행복한 임신과 출산,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국토교통부	맞춤형 고용·복지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국민안전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해양수산부	맞춤형 고용·복지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여성가족부	맞춤형 고용·복지	건강한 가정 만들기, 다문화가족 적응지원 강화, 복지일자리 확충 및 처우 개선,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국민안전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강화
	사회통합	공직임용의 기회균등과 공평한 대우
국민권익위원회	맞춤형 고용·복지	다문화가족 적응지원 강화
국가인권위원회	맞춤형 고용·복지	다문화가족 적응지원 강화,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국민안전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법제처	맞춤형 고용·복지	건강한 가족 만들기, 다문화가족 적응지원 강화,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조달청	창조경제	중소기업성장희망사다리 구축
중소기업청	창조경제	중소기업성장희망사다리 구축
특허청	창조경제	중소기업성장희망사다리 구축
통계청	맞춤형 고용·복지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소방방재청	맞춤형 고용·복지	다문화가족 적응지원 강화,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농촌진흥청	맞춤형 고용·복지	다문화가족 적응지원 강화,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산림청	맞춤형 고용·복지	행복한 임신과 출산,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여성관련 정책은 맞춤형 고용·복지 분야의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등이 있음

맞춤형 고용·복지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 ☑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일·가정 양립 추진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여성관련 정책은 맞춤형 고용·복지 분야의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등이 있음

맞춤형 고용·복지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 직장 보육시설 확대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 ☑ 경력단절여성 공공기관 채용, 시간선택제 적합직무 발굴, 인사·보수·승진 가이드라인 마련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 여성관련 정책은 맞춤형 고용·복지 분야의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이 있음

맞춤형 고용·복지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 출연(연) 내 보육시설 확충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 ☑ 여성리더 양성을 위한 '과기여성인재아카데미' 운영('14년 상)
- ☑ R&D 경력복귀 지원 확대(14년 100명), 여성과학 기술인 채용 확대

교육부

교육부 여성관련 정책은 맞춤형 고용복지 분야의 다문화 가족 적응지원 강화,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이 있으며 창의교육 분야의 100세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 국민안전 분야의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있음

맞춤형 고용·복지

〈다문화가족 적응지원 강화〉

- ☑ 다문화학생 예비학교 확대(52교→80교)
- ☑ 다문화학생 대학생 멘토링, 글로벌브릿지 프로그램 제공 및 직업교육 협력기관 확대(3개→10개)
- ☑ 탈북자녀 지원
 - 탈북 대안학교 지원(8교)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단계별 교육경로 체계화(초기(하나둘학교)→전환기(한겨레중·고)→정착기(일반학교)) 및 전환기 학교 직업교육과정 확대 지원
- ☑ 다문화교육 중점학교(120교) 육성 및 다문화언어 강사 역량제고 추진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 초등 1~2학년 오후·저녁 돌봄 서비스 확대
 - 오후돌봄(방과후~오후5시) : 7,395실→11,421실
 - 저녁돌봄(오후5시~밤10시) : 1,927실→4,046실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 ☑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현직 교사 시간선택제 전환('14. 9월), 신규채용 시간선택제 교사 선발('14. 12월))

창의교육

〈100세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

- ☑ 경력단절여성 평생교육 지원 강화
 -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사업”과 연계한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 평생학습중심대학 선정 시 경력단절여성 대상 전문가과정(비학위) 개설 여부 평가
- ☑ 다문화가족, 탈북주민 대상 문해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맞춤형 고용·복지

〈다문화가족 적응지원 강화〉

- ☑ 결혼이민비자 발급단계에서 배우자간 의사소통·부양능력 검증 강화
- ☑ 국제결혼 맞춤형 사회통합 프로그램 실시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 ☑ 육아휴직 인원 증원 등을 통한 여성검사 경력단절 해소

국민안전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 ☑ 학생대상 성범죄 교원 교단 배제, 실형 등 선고 시 교원자격 박탈 검토

국민 안전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 ☑ 지능형 전자발찌 개발 및 감독인력 증원(14개팀→26개팀)
- ☑ 피해자 지원 ‘국선전담변호사’ 및 ‘법무담당관’ 증원
- ☑ 범죄 피해자 통합지원 네트워크 확대
- ☑ 전국 검찰청 형사조정제도 활성화
- ☑ 아동,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 대상 진술조력인제도 전면 시행

통 일 부

통일부 여성관련 정책은 맞춤형 고용·복지 분야의 다문화가족(탈북자 포함) 적응지원 강화가 있음

맞춤형 고용·복지

〈다문화가족 적응지원 강화〉

- ☑ 북한 내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 인도적 지원 강화
- ☑ 여성 탈북민 출산·육아 부담 최소화 및 취업지원 강화, 자산형성제도(‘행복통장(가칭)’) 도입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국 방 부

국방부 여성관련 정책은 맞춤형 고용·복지 분야의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있음

맞춤형 고용·복지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 어린이집 및 공동육아 나눔터 설치 확대(‘14년 4개소)
- ☑ 육아휴직 관련 군 인사법 개정

법 무 부

법무부 여성관련 정책은 맞춤형 고용·복지 분야의 다문화가족 적응지원 강화,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국민안전 분야의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있음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 여성관련 정책은 맞춤형 고용·복지 분야의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국민안전 분야의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있음

맞춤형 고용·복지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 ☑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및 대체인력 활성화
-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1.4만개) 추진

국민안전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 ☑ 가정방문 서비스 유형별(택배, 검침, 수리·배달) 안전대책 수립
- ☑ '여성 안심귀갓길' 확대, 여성 1인가구 원룸건물 방범 인증제, 지역경찰 책임담당제 등 추진
- ☑ 4대악 감축목표 상향 설정('17년: 성폭력범 미검거율 9.1%, 가정폭력 재범률 10.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관련 정책은 맞춤형 고용·복지 분야의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등이 있음

맞춤형 고용·복지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 ☑ '이야기할머니' 확대('13년 900명→'14년 1,600명 →'15년 2,300명)
- ☑ '저작권 안심 콜센터' 설치 및 경력단절여성 채용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관련 정책은 맞춤형 고용·복지 분야의 다문화가족 적응지원 강화,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있음

맞춤형 고용·복지

〈다문화가족 적응지원 강화〉

- ☑ 농지연금 지원대상 확대
 - 농지연금 가입연령조건 완화로 다문화가정 등 부부간 나이 차이가 큰 경우도 가입대상 포함 ((현행) 부부 모두 65세 이상 → (개선) 농지소유자만 65세 이상)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 공동아이돌봄센터 등의 농촌 행복나눔센터 확충 ('14년 25개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관련 정책은 맞춤형 고용·복지 분야의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등이 있음

맞춤형 고용·복지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 ☑ 시간선택제 전환 연구원 인건비 지원, 경력복귀 지원 프로그램 신설, 가점 규정 강화, 여성공학인 고용 포럼 운영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여성관련 정책은 맞춤형 고용·복지 분야의 건강한 가정 만들기, 복지 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행복한 임신과 출산,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이 있음

맞춤형 고용·복지

〈건강한 가정 만들기〉

- ☑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 '마더세이프 프로그램' 개발 및 멘토링 서비스 지원
 - 미혼모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및 채용 할당제(사회복지시설 등) 도입 검토

〈복지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

-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단계적 인상* 및 대체교사 확대**
 - * '13년 월12만원 지급→'14년 월15만원 지급
 - ** '13년 월 366명 채용→'14년 월 428명 채용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 ☑ 사회복지사 등 전문직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행복한 임신과 출산〉

- ☑ 맞춤형 임신·출산비용 지원
 - 난임부부 체외수정술 지원기준 확대
 - 영유아 국가예방접종 본인부담 폐지 및 예방접종 항목 확대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시범사업 실시
- ☑ 임신 분만 취약지역 지원
 - 분만취약지 공공형 산부인과 확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센터(3개소 시범사업) 설치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 중소기업 밀집단지 어린이집 설치('14년 45개소)
 - 의무사업장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70%까지 제고(~'17년)
 -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150개소 지속 확충

☑ 시간제 보육반 도입

-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시범사업 실시('14년) 후 확대('15년)

☑ 야근·휴일 보육 강화

- 모든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추진
- 시간연장·휴일보육 실시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 맞벌이자녀에 유리한 보육환경 조성

- 온라인 입소대기관리시스템 구축 및 입소 우선순위 조정
-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 맞벌이자녀 보육기관 인센티브 부여 추진

☑ 출산·양육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 아빠 육아참여 및 가사분담 문화 확산
- 기업문화 개선 MOU 추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여성관련 정책은 맞춤형 고용·복지 분야의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서비스 강화, 행복한 임신과 출산,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등이 있음

맞춤형 고용·복지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서비스 강화〉

- ☑ 「새일센터」 확대('13년 120개소→'14년 130개소)
- ☑ 고학력여성 대상 「리턴 아카데미사업」 추진
- ☑ 전문직종 직업훈련 확대('13년 20개→'14년 40개, 폴리텍대 활용)
- ☑ 경력단절 유형별 맞춤형 취업성공패키지 개발·운영

〈행복한 임신과 출산〉

- ☑ 임신 등 사유 보유 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 ☑ 현재 시행중인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 (현행)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최대 1년)→(개선)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근무기간 연장(최대 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통상임금 40%→60%)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 ☑ 모성보호 관련 사업장 지도·감독 및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AA) 미이행 시 명단공표('15년 1월)
- ☑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채용
 - 공무원(~'17년 4천명), 교사('14년 도입), 공공기관(~'17년 9천명) 등
- ☑ 육아연계형 스마트워크센터 설치 지원('14년 2개소)
- ☑ 민간대체인력뱅크 구축 및 대체인력지원금 확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여성관련 정책은 맞춤형 고용·복지 분야의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국민안전 분야의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있음

맞춤형 고용·복지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 ☑ 경력단절여성 시간제 일자리 창출('14년 119명, 전 일제 기준 64명)
- ☑ 경력단절여성 마을버스 운전 취업 시범사업 추진

국민안전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 ☑ 성폭력 수사팀(강북권) 및 철도범죄수사센터(광주) 신설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여성관련 정책은 맞춤형 고용복지 분야의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등이 있음

맞춤형 고용·복지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 ☑ 공공기관 38개 직위 일자리→시간선택제 전환
- ☑ 연근해 자원조사원, 수산물 원산지 단속 등 시간제 채용 확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관련 정책은 맞춤형 고용·복지, 국민 안전, 사회통합 분야 등 여러 부분에 걸쳐있음

맞춤형 고용·복지

〈건강한 가정 만들기〉

- ☑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확대
 - 결혼·임신·출산 등 생애주기 맞춤형 부모교육 확대, 공공기관·정부기관 등 직장교육과정 개설 확대
- ☑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 아이돌보미 지원 1순위 부여, 생활거주형 임대주택(66호) 확충
 - 자녀양육비 지급 이행강제기관 설치·운영 및 관련 법률 제정

〈다문화가족 적응지원 강화〉

- ☑ 국제결혼 실태조사 실시
- ☑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통합 운영 및 상담 서비스 강화
- ☑ 부처간 유사사업 조정 강화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와 「외국인정책위원회」 합동 운영 추진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중심 핵심과제별 실무협의체 설치·운영
- ☑ 다문화가족 해체 시 다문화가족 자녀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상담 지원

〈복지일자리 확충 및 처우 개선〉

- ☑ 아이돌보미 수당 인상(시간당) : ('13) 5,000원 → ('14) 5,500원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 영아종일제 지원아동 연령 확대 : ('13)만 0세(3~12개월) → ('14)만 1세(3~24개월)
- ☑ 다양한 아이돌봄서비스 등 시범운영 : 종합형(기본형+가사서비스), 보육교사 파견형 등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 ☑ 여성관리자 양성을 위한 여성인재아카데미 운영, 여성인재 DB시스템 운영
- ☑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일자리 제공 및 가족친화 경영 확대
 - 유형별(농촌형, 경력개발형, 자립지원형 등) 새일 센터 시범 운영
 - 전문기술훈련 및 기업과 연계한 현장맞춤형 훈련 확대
 - 중소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준 마련, 일·가정 양립 핵심지표 중심으로 인증제도 개선
 - 정부지원 사업 참여기업 선정 시 가족친화 인증 기업 우대
- ☑ 유연한 일자리 확대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정착
 - 시간선택제 일자리 적합직종 개발 및 모범사례 확산
 -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리턴십 프로그램 도입
- ☑ 부문별·지역별 성평등 수준의 실질적 개선
 - 양성평등 실천 태스크포스 구성(상반기, '17년까지 3년간 한시적 운영)
 -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국민 제감도 제고
 -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방안 연구실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강화〉

-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 10세 이상 남아(男兒) 동반 피해자 보호시설 16개 → 22개
 - 폭력피해여성 및 동반가족 보호시설 156호 → 196호
 - 여성긴급전화 긴급피난처 17개소 → 18개소
 - 폭력피해 이주여성쉼터 22개소 → 25개소
- ☑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 확대(각급학교 →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 ☑ 「피해자에 대한 편견 깨기」 캠페인 민·관 합동 추진

사회통합

〈공직임용의 기회균등과 공평한 대우〉

- ☑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확대('13)27.7% → ('14)31.6% → ('17)40.9%)
- ☑ 정부부처 고위공무원단 여성 임용 확대(4급 이상 여성관리자 : ('14)10.9% → ('17)15%)
- ☑ 군·경찰 여성관리자 및 여성비율 확대 이행 독려

국민안전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 ☑ 성범죄자 알림e 모바일 서비스 제공, (성)범죄경력 조회 시스템(온라인) 구축
- ☑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확대
 - 한부모, 조손가정 아동/지적장애인 피해자 치료동행 서비스 지원
 - 13세 미만 아동/돌봄 자녀가 있는 경우 돌봄서비스 지원
 - 외상 피해 등으로 입원 시 간병비 지원
- ☑ 일본군 위안부 지원
 - 위안부 관련 기념일 제정 추진, 위안부 주제 영화 및 다류 등 제작 지원
 - 관련자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17년)
 - 생활안정지원금 및 간병비 지원액 인상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여성관련 정책은 맞춤형 고용·복지 분야 다문화가족 적응지원 강화 등이 있음

맞춤형 고용·복지

〈다문화가족 적응지원 강화〉

- ☑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확대(14회 → 18회)
- ☑ 다문화가족 등 정책개선을 위한 「권익증진 민·관 네트워크」 구성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관련 정책은 맞춤형 고용·복지 분야의 다문화가족 적응지원 강화,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등이 있으며 국민안전 분야의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있음

맞춤형 고용·복지

〈다문화가족 적응지원 강화〉

- ☑ 연예홍행비자(E-6) 소지 이주여성 인권실태 조사
- ☑ 인권선진국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 벤치마킹
- ☑ 다문화가정 인권순회상담 활성화
- ☑ 이주민(북한이탈주민 포함) 인권증진 감수성 향상 과정 운영
- ☑ 미등록 이주아동 실태파악 및 인권 증진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 인권친화적 돌봄시설 기반 조성
 - 돌봄시설 인권교육 실시
 - 국가인권위원회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 보급 확산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 ☑ 공적분야 여성대표성 강화 방안 모색
- ☑ 특정직 공무원(경찰, 소방, 교정 등) 성차별 실태조사

국민 안전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 ☑ 여성군인 등 군대분야 성희롱 예방 및 구제 홍보물 제작 및 보급
- ☑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 및 구제
- ☑ 여성 감정노동자 인권상황 개선

법 제 처

법제처 여성관련 정책은 맞춤형 고용복지 분야의 건강한 가정 만들기, 다문화가족 적응지원 강화,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이 있음

맞춤형 고용·복지

〈건강한 가정 만들기〉

- ☑ 한부모가족 자녀 법제교육 확대(한부모가정지원 센터 등과 연계)

〈다문화가족 적응지원 강화〉

- ☑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법제교육 확대(전국다문화 가족지원단등과 연계)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 보육 등 개인별 맞춤형 생활법령시스템 제공

조 달 청

조달청 여성관련 정책은 창조경제 분야의 중소기업성장 희망사다리 구축이 있음

창조경제

〈중소기업성장희망사다리 구축〉

- ☑ 여성기업 조달시장 참여 촉진
 - 여성기업 수주비중 확대('13년(6.3%)→'14년(7.0%)→'16년(8.0%))
 - 소액 수의계약대상 확대(2천만원→5천만원 이하), 소규모공사 입찰 시 가점 부여
- ☑ 입찰·계약,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여성고용 우수기업 우대
- ☑ 여성 창업기업제품 및 고용창출 우수기업 제품 구매 시 조달수수료 할인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여성관련 정책은 창조경제 분야의 중소기업 성장희망사다리 구축이 있음

창조경제

〈중소기업성장희망사다리 구축〉

- ☑ 공공기관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물품·용역 : 5%, 공사 : 3%) 강화(권고제→의무제)
- ☑ 여성기업 DB제공으로 제품 구매 의무화 유도

특 허 청

특허청 여성관련 정책은 창조경제 분야의 중소기업성장 희망사다리 구축이 있음

창조경제

〈중소기업성장희망사다리 구축〉

- ☑ 여성발명경진대회-사업화 연계 지원
- ☑ 각종 발명행사(5월 세계여성발명대회 등) 대상별·목적별 통합 및 연계

통 계 청

통계청 여성관련 정책은 맞춤형 고용복지 분야의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등이 있음

맞춤형 고용·복지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 ☑ 일·가정 양립 지표체계 구축 및 지표별 통계 수집·관리
- ☑ 경력단절여성 등 정책맞춤형 고용통계 작성·제공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여성관련 정책은 맞춤형 고용·복지 분야의 다문화가족 적응지원 강화,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 평등 확산 등이 있음

맞춤형 고용·복지

〈다문화가족 적응지원 강화〉

- ☑ 다문화 의용소방대 확대 운영(결혼이주자 소방안전 교육, 119 신고 통역지원 등)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 ☑ 유연근무 및 스마트워크 활성화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여성관련 정책은 맞춤형 고용·복지 분야의 다문화가족 적응지원 강화,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 평등 확산 등이 있음

맞춤형 고용·복지

〈다문화가족 적응지원 강화〉

- ☑ 농촌 다문화가족 관계향상 지원 진단표 및 매뉴얼 개발
- ☑ 정착애로 다문화가정과 농촌여성지도자 간 '친정 엄마 맺기' 추진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 ☑ R&D, ICT, 6차 산업 일자리 창출 추진

산 림 청

산림청 여성관련 정책은 맞춤형 고용·복지 분야의 행복한 임신과 출산,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이 있음

맞춤형 고용·복지

〈행복한 임신과 출산〉

- ☑ 임신부 숲태교 프로그램 제공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 ☑ 산림 일자리 창출(단기(31천개), 장기(5천개)) 및 창업 활성화 지원



〈참고 : 여성·가족관련 국내 주요정책 동향 (2014.1-3)〉

☑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유연한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기반 강화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첫 국무회의(2014.1.7)에서 여성경력단절 예방이 국정 우선목표라고 강조한 바 있으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린 2014년 여성계 신년 인사회(2014.2.4)에서도 2014년을 일·가정 양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연초부터 범부처별로 경력단절여성 지원 대책이 발표되고 있으며 2014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중앙행정기관 대부분이 경력단절여성 대상으로 유연한 일자리 제공, 보육서비스 확대, 일·가정 양립지원 등의 정책을 실행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주요 경력단절여성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관계부처(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합동으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이 발표(2014. 2. 14)되었으며 여성 생애주기별(임신·출산→영·유·아→초·중·고→재취업)로 모성보호, 보육·돌봄, 재취업 지원, 일·가정 양립문화를 조성하여 여성의 경력유지 및 경제활동참가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력단절여성 대책 포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유연한 일자리 제공, '가족친화 인증기업' 혜택 확대, 육아기 여성 시간선택제 일자리 선택 후 전일제 복귀 보장 등으로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 간담회(2014.2.15)에서 여성인력 활용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밖에, 기획재정부는 경력단절여성을 적극 고용하는 내용을 담은 「2014년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을 확정하여 공공기관에 전달하였으며 안전행정부도 상반기에 첫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선발할 계획에 있다.

☑ 여성노인의 빈곤위험 해소 및 노후소득 보장 방안 마련

정부는 직장을 그만 둔 경력단절 여성이 추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2014.1.23~3.4)했으며 의견 수렴 후 개정안을 확정, 빠르면 2015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전업주부는 가입이력이 있어도 임의가입을 하지 않는 한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개정안 통과 시 추가보험료 납부 없이 지역가입자로 전환 및 장애·유족연금 수령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사망 배우자가 남긴 재산의 절반을 생존배우자가 먼저 받도록 하는 상속법 개정안이 현재 논의 중이다. 법무부는 최종 개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낼 계획이었으나 이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추가의견 수렴 후로 입법 예고가 연기된 상태이다. 법무부는 2006년 배우자 상속분을 상속재산의 5할로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반대 여론에 실패한 경험이 있어 이번 개정안에 대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및 비양육부모 책임 강화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정이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제도를 통하여 미성년 자녀가 최소한의 생존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법률안에 따르면 양육 한부모가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전담기구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하여 양육부모 상담, 양육비 채무자 소재 파악, 소득·재산 조사 등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양육비이행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양육비 지급 이행 확보제도 개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또한 양육비 미지급으로 자녀가 곤란한 상황에 있는 경우 국가가 양육비 선지급 후(최대 9개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 지급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국가가 사적 채무관계인 양육비 문제에 개입 시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5년 3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률 제정은 한부모가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작은 발걸음에 불과하지만 가장인 동시에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으로 빈곤의 삼중고에 놓인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집필 : 정윤미 연구원)